

대구시-경북도, 與野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건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 아닌 국가 균형발전 이끄는 핵심 축 권한 이양·재정 자율성 확보”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방문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과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시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치권과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사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

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김 권한대행과 이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 시행의무를 특별법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만드는 백년대계”라며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가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정치권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공식동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본격적인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구=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울주군

군립병원 공식명칭 지정

울주군은 상반기 개원을 앞둔 군립병원의 공식 명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2년부터 군립병원 건립을 진행해 왔다. 온양읍에 들어서는 이 병원은 55병상 규모로 응급실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다.

응급의학과·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과·가정의학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가 운영된다.

병원 명칭은 공공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 의견을 폭넓게 모았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고흥군

저공해車 민간 보급사업 신청

고흥군은 기후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3일부터 2026년도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민간 보급사업 상반기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군은 금년에 1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기 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50대, 수소 승용차 2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년 이상 보유한 본인 명의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구매자에 대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신설돼 전기자동차 구매 유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흥(전남)=양수녕 기자

김해시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

김해시는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수상 정책은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김해형 탈플라스틱’이다. 이번 정책대상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는 상으로, 정책 형성부터 집행, 성과까지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 체감형 과제로 삼고, 명절 성묘 문화의 플라스틱 조화와 장례식장 일회용품, 폐현수막 등 일상 현장에서 감축·대체·순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실천형 정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갱신·보장 확대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지난해보다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충남도, 천안아산 'K-팝 돔구장' 추진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TF’ 첫회의 2031년까지 1조 투입, 5만석 조성 프로야구·공연 등 행사 유치 예정

충남 천안아산 ‘K-팝 돔구장’ 건립 추진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남도는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도와 천안·아산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돔구장 건립을 공식 발표한 이후 2개월여 만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추진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KTX 천안아산역 인근 도보 10~20분 거리 약 20만㎡ 부지에 2031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5만석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돔구장에서는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을 비롯해 축구·아이스링크 경기와 연 150~200일 규모의 K-팝 공연·전시, 대기업 행사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돔구장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천안아산역 일원에 광역환승 복합센터도 함께 추진한다.

광역환승복합센터는 충청권 교통 허브 조성과 광역 환승 체계 고도화,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673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양산형 지역 필수의사제’ 운영 본격화

24시간 응급진료 안정적 수행 지역 환자 중심 운영 유지 목표

양산시는 2026년 2월부터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양산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부형 제도의 상급 병원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현장 맞춤형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필수의사제 공모에서 경남,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가 선정됐다. 경남은 양산부산대학교 병

원,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 의료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보다 2차 병원의 필수 의료 인력난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응급·입원·야간 진료 등 24시간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이 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시는 의료 인력난으로 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병원이 24시간 응급 진료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환자 중심 운영 체계를 유지하도록 돋는 게 목표다.

/양산(경남)=장선호 기자 metrobusan2601@

울진군, 지난해 관광객 890만명 유치

전년比 8%↑… 평균체류시간도 상회

울진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관광객 890만 명을 유치하며 전국 기초자체 중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냈다. 평균 체류시간과 숙박률, 관광소비액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지표를 기록했다.

군은 2025년 연간 방문객이 총 890만 3990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이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데이터에 신용카드 소비 분석을 결합해 도출됐다. 평균 체류시



울진역 플랫폼에서 관광객들이 열차 탑승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간은 1801분으로 전국 기초자체 평균 1021분을 크게 상회했으며, 1박 이상 숙박자 비율은 20.4%로 전국 평균인 7.1%의 세 배에 달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news8082@

광주시, 시민 주도 ‘에너지 분권실현’ 나서

올해 총 103억 예산 투입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공유하며 마을 단위의 자립을 이끄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실현’에 본격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운영 ▲시민 향빛발전소 지원 강화 ▲주택 향빛발전소(미니태양광)를 보급한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특히 광주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 접점 확대’와 ‘체계화’로 두고 올해 총 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먼저 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5곳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민 향빛발전소’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일반 협동조합이 공동부지 등을 활용해 친환경 발전소를 조성할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최대 2억 원)를 지원한다.

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단독·공동주택 150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향빛발전소(미니태양광)’를 보급한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